

약속Ⅶ

군민의 눈높이에서 일 잘하는 가평군이 되겠습니다.

예산 및 사업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

관리번호	분야	중점 추진과제	사업주체	신규여부	사업시기	완료시기
Ⅶ-2	행정	주민참여는 더 활발하게	가평군	신규	단기	임기 내
추진부서	기획예산담당관		기획팀장	조경아(2050)	담당자	윤희준(4628)
협조부서	행정복지국	자치행정과	인사팀장	박석현(2125)	담당자	유호열(2126) 하영하(2128)
추진현황	■완료 □이행후계속 □정상추진 □일부추진 □보류 □폐기				공정률	100%

□ 추진방향

-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예산확보, 정책자료 수집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
- 가평군 대외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2. 7. ~ 2023. 12.
- 사업위치: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(여의도동) 여의도파라곤 413호
- 사업규모: 사무공간: 73.46㎡ / 직원: 임기제 5급 1명, 7~8급 2명
※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명, 6급 1명 서울사무소 근무
- 소요예산: 482백만원 ※ 공약실천계획서: 200백만원

구분	총사업비	기투자	임기 내						임기 후	비고
			소계	2022	2023	2024	2025	2026		
계	482		482		125	119	119	119		
국비										
도비										
군비	482		482		125	119	119	119		
기타										

- 사업내용
- 조직진단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신규 행정기구 모델 도출

• 서울사무소 위치, 운영방식, 직원 선정 방식, 타당성 등 세부 검토 실시

• 서울사무소 개소

□ 연도별 목표 및 추진계획

구 분	목 표	추진계획	목표이행률	이행률
계			100	100
2022 하반기	· 계획 수립 · 조직진단 용역 추진 (자치행정과)	· 조직진단 용역 추진계획 수립 · 조직진단 용역 추진 ·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(안) 수립	10	10
2023 상반기	· 세부 검토 추진 · 조직 신설 의뢰 (기획예산담당관)	· 서울사무소 운영 세부 검토 추진 - 파견 직원 선정 방식, 운영방안 - 서울사무소 상시 운영 타당성 검토 - 서울사무소 위치 선정 등 · 조직 신설 의뢰(팀 규모, 소속 과 등)	40	40
2023 하반기	· 인사 발령 (자치행정과)	· 인사 발령	10	10
	· 서울사무소 운영 (해당 부서)	· 서울사무소 운영	40	40

□ 추진실적

구 분	추진실적	비 고
2022	3분기 · 조직진단용역 착수 및 관련 자료 제출 · 조직진단 용역 관련 부서별 의견 수렴 · 부서별 인터뷰 완료	
	4분기 · 가평군 서울사무소 설치계획 수립 ·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의견 수렴 · 조직진단용역 최종(중간)보고회 개최 · 「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공포	
2023	1분기 · 「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시행 · 가평군 서울사무소 설치 변경 계획 수립	
	2분기 ·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 의결 · 서울사무소 부동산 임대차 및 리모델링 공사 계약 체결 · 시간선택제임기제(소장) 채용 의뢰	
	3분기 · 시간선택제임기제(소장) 임용 · 서울사무소 개소 및 운영 [2023. 8. 11.]	
	4분기 ·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·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(재난안전 12, 지역현안 10) · 국도 75호선 (24년)도로개량사업비 2억	
2024	· 상반기 특별교부세 18억(재난안전 9, 지역현안 9) ·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장관,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· GTX-B 노선 연장 및 경춘선 ITX 청평면 정차 협의 ·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(재난안전 9, 지역현안 14) · 25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5억 및 탄소중립센터 운영 지원 1억 예산 확보	
2025	· 접경지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(25. 3.) 국회·중앙부처 국비확보 정책 협의 · 대한민국 숙박 페스타 할인쿠폰 수도권 제외(인구소멸 가평군 포함) 관계기관 정책 협의 · 자기주도학습센터 유치 관련 국회·중앙부처 정책 협의 · 평화경제특구법(시행령) 대상지역(가평군 포함) 국회·중앙부처 정책 협의	

□ 기대효과

○ 국비확보, 입법활동, 투자유치 등 동향파악 신속 대응